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만족도 연구[1)]

Self-Support Business by Participation Property and Satisfaction

김 환 철 (경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 주저자)
김 정 미 (의정부 시청 - 공동저자)

Abstract

Kim, Hwan-Cheol / Kim, Jeong-Mee

This study of participants in the program Uijeongbu self in the center of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the business physical self satisfaction, if the difference is intended to identify those factors. Thus, conditional recipients and potential welfare recipients if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projects for self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constant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interaction, based framework to evaluate and compare projects for self determination and self-supporting in terms of the properties affected by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hether were analyz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he possible employment of a more targeted group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Second, the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subsidy', and 'incentives' should be introduced. Third,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for the working poor linkage program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in conjunction with an effective individual case management systems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should be built. Fifthly, whether the current self-supporting business support policy, as the square of the remaining support for the self-employed should be strengthened After all the business success of self sustainabilindividupwith an effecwill be on, vidutherefore self projects through cooperation with third-pwity industry is a very important result of the expansion seems to be able tob represent values.

주제어: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의지, 만족

Keywords: Conditional recipient, potential welfare recipients, self determination, satisfaction.

1) 본 연구는 2010년 김정미 자활사업의 석사학위논문을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Ⅰ. 서 론

1961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반이 된 생활보호법은 급여의 확대를 꾸준히 이루어왔지만 대상범위나 급여의 수준에 있어서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대두되며, 빈곤의 확대는 현실에서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고, 빈곤문제해결은 사회발전과 안정의 관건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새롭게 생겨난 절대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DJ 정부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최저생계보장을 사회적 책임과 권리로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 10월부터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공공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수준이 결정됨에 따라 공식적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보장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둘째,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게 되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전 국민 대상의 공공부조제도임을 의미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자활지원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다(이현주 외, 2003).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핵심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강제성을 띈 제도로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단순히 생계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획기적인 제도로 주목을 받았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활제도를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적복지의 실현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로 개선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였으며, 특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만족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자활사업의 본래 취지인 자립·자활과도 연관이 있는 것

으로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정부시 자활사업 참여자들 중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정한 분석 틀에 입각하여 상호·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단순히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의 물질적 보호 차원을 통해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만족했던 기존 빈곤대책들에서 벗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저소득층 자활사업 여건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기술 습득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기존의 놀고먹는 복지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주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할 필요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상록(2000)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의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에의 질적 보호 지원 삭감의 제도적 장치 혹은 지원 삭감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이 전락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경혜(2001)는 자활사업 참가대상자들에게 자활사업 참가동기를 제고하고 저축을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립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자립준비 적립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미(2002)는 서울·경기지역의 여성참가자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 근로의욕과 소득변화를 변수로 설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는데 연령, 건강상태, 이전 직장근무형태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밝히며 여성참가자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자활프로그램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였다.

노대명(2002)의 연구에 의한 자활사업의 문제점은 자활사업의 기본 설계에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 급여원칙은 수급자가 근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생계급여가 감소하여 근로 의욕을 감퇴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의 자활사업은 자활참여가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이행되었을 뿐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인센티브가 거의 전무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박상우(2002)는 자활사업의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개발, 자활동기를 부여할 근로유인장치,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신진영(2003)은 전라남도지역의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지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소득에 대한 만족, 자활근로에 대한 만족, 주거에 대한 만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수급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 및 생활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민숙(2004)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와 만족도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개입방안"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활사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요인, 경제적 특성요인, 자활사업 특성요인, 사회복지 서비스요인에 대한 만족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자활도 중요하지만 자활의 여성화에 따른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소득층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 자녀들에 대한 청소년 학습지도, 방과 후 공부방, 자녀보호 등의 강화를 통한 아동보육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의 경제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고 후원금 및 후원금품의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 가정에 대한 자원봉사와 간병인서비스 및 가정봉사원 파견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문제, 자녀문제, 부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권태열(2005)은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자활근로사업의 특성, 자활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 자활사업의 참여자 만족도를 알아보았지만, 분석한 질문지가 188개라는 점과 동구라는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여 진다.

그는 효과적인 자활프로그램의 개발로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전망과 내용을 가진 사업의 개발이 요구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동안 자활근로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검증된 몇 가지 사업(예를 들면, 간병인, 집수리, 숲 가꾸기, 도배 등)이 있지만, 조건부수급자들의 근로조건이 공공근로 참여자들에 비해 취약하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 제시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건이행의 거부, 기피 현상은 근로능력이 높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참여 프로그램이 부재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로그

램의 빈곤으로 인한 기피현상은 다양한 층에서 골고루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합한 사업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진규(2005)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특성, 자활사업의 정서적 내적요인에 대한 만족도, 자활사업의 물리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수급자 선정 기준에 있어 자활의지 반영 부족을 들고 있다.

조건부 수급자 결정에 있어 현재 1차는 근로능력의 점수화에 따라 결정하고 있고, 2차는 수급자의 자활욕구에 따라 취업 대상자 및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자활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차 근로능력의 점수화는 근로능력 점수표가 다로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대상자의 나이와 학력, 취업 경력 등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활의지 반영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고, 학력 및 자활의지가 높은 수급자가 취업 알선을 원하나 근로능력 점수 기준에 의한 평가가 45점인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취업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장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 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생계 급여를 중지하고 있지만, 조건 불이행자의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는 소득보다 본인이 일을 하여 얻은 은폐된 소득이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조건 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조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료 또는 교육급여 혜택만을 받아도 괜찮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수급자에게까지 전파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호(2006)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광주광역시 5개구 5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 자활사업 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별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만족도를 분석하여 사회복지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이 너무나 시장형에 얽매이다 보니 사회복지 욕구 즉, 상담사업이나, 가족복지사업, 후원 및 결연사업 등에 미흡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초기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근로빈곤층이 근로의욕과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택이 가능한 자활사업으로 이행을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연정(2006)은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의 자활 효과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 및 인적자본 특성, 가족특성, 심리사회적특성, 경제

적 특성, 자활사업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객관적인 특성 이외에도 심리사회적인 특성들이 자활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심리사회적 특성인 자활사업의 교육프로그램 부족을 제시하면서, 일을 통한 복지 정책인 자활사업에서는 참여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 자활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은 자활사업에 대한 기초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고,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한다. 결국 참여자들의 인적개발을 통해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양적·질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며, 특히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활후견기관 뿐만 아니라 광역자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협회 등의 자활사업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한 통합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자활사업은 일자리·기술·자금부족 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며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으로 자활 자립의 계기를 제공하여 나아가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참여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성훈(2008)은 대구광역시의 7개 지역자활센터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의 참여특성과 만족도” 조사에서 연령, 학력, 자화수급지위, 가족특성, 경제적특성에 따라 분석하여 성별과 건강상태에 따른 자활사업만족도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특성 중 소득만족여부와 월 저축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활사업 만족도가 월 저축액과 차이가 있음을 밝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함을 나타냈으며, 자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금의 적절한 보장이 나타났고, 소득만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임금이 자활의지를 꺾을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자립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장려금액은 근로유인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숙(2008)은 광구광역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만족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구성요소를 설병, 연령, 혼인, 주택소유, 가구원, 건강수준으로 보고 근로환경을 일일 노동시간, 주간노동일수, 월평균 소득, 지원받은 서비스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유인과 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서도 소득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활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건강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근로환경은 서비스 지원이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냈고, 결국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자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영역들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특성 요인들을 요약해 보면, 자활사업의 정책적 대상이 되는 개인특성과 자활사업특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활사업 만족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자활사업 근로환경 특성요인들로 범주화 하고자 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족구성, 주 수입원, 월평균소득, 가장 큰 지출항목, 혼인상태, 주택형태, 주거상태, 부채상태, 부채금액, 부채원인, 건강상태, 질병형태, 치료상태, 치료 받지 않는 이유채상이 포함되고 이러한 요인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에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며, 자활욕구와 능력을 촉진, 또는 저하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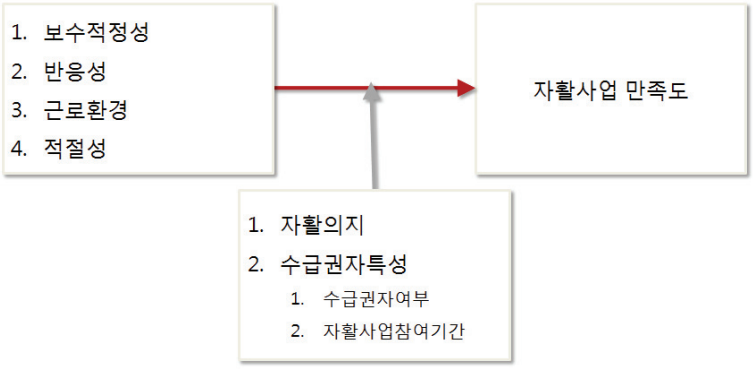
자활사업 근로환경의 특성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 자활사업 참여기간, 실직기간, 자활사업 참여이유, 참여전 고용형태, 일자리탐색 노력, 자활사업에서 하는 일, 자활에 가장 필요한 것 등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자활사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활사업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보고 자활사업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만족의 특성을 네가지로 구분하여 만족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활의지 및 수급권자의 특성을 통해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여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설문구성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서베이 조사방법(survey research method)를 채택하였고, 설문지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하고, 설문 문항을 모두 리커트(Likert)형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첫째, 자활사업의 만족도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주로 손능수(2005)와 박현숙(2009)이 구조화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종속변수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으로 박현숙(2009)이 구조화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축소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개인적 특성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의 구성과 각각의 출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구성

변 수 명			출 처	문항 수
독립 변수	자활사업 특성	보수적정성	손능수(2005), 박현숙(2009)	1-4
		반응성		5-8
		근로환경		9-10
		적절성		11-13
종속 변수	자활사업 만족도		손능수(2005), 대명(2008) 박현숙(2009)	14-18
조절 변수	자활의지		박현숙(2009)	19-22
	기초수급자, 참여기간		신진영(2003), 손능수(2005) 박현숙(2009)	23-39
총 문항 수			39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조사표의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8%, 여자가 92%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26%, 40대 55%, 50대 이상 15%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가 33%, 이혼 46%, 사별이 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은 2인 가족이 15%, 3인 가족 47%, 4인 가족 25%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중학교 13%, 고등학교 75%, 2(3)년제 대학이 5%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학력이 낮고 이혼의 비율이 높아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성별	여성	92	92.0	연령대	20세 이하	1	1.0
	남성	8	8.0		21~30세	2	2.0
	Total	100	100.0		31~40세	26	26.0
혼인상태	미혼	6	6.0		41~50세	55	55.0
	유배우	33	33.0		51~60세	15	15.0
	이혼	46	46.0		61세 이상	1	1.0
	사별	11	11.0		Total	100	100.0
	기타	4	4.0	학력	초등학교	4	4.0
	Total	100	100.0		중학교	13	13.0
가족구성	1인가족	6	6.0		고등학교	75	75.0
	2인가족	15	15.0		2(3)년제 대학	5	5.0
	3인가족	47	47.0		4년제 대학	3	3.0
	4인가족	25	25.0		Total	100	100.0
	5인가족 이상	7	7.0				
	Total	100	100.0				

Ⅳ. 분석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활사업의 특성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보수적정성 .847, 반응성 .863, 근로환경 .771, 적절

성 .761 모두 0.7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부적인 결과도 적절성의 경우 0.6 이하의 문항도 존재하나 전체적인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활사업 특성에 대한 신뢰성 검증

요인	Cronbach's α	설문문항	설문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보수	.847	현 자활급여소득 적당	.789
		노력한 만큼 보수 지급	.800
		근로시간에 적정한 보수	.790
		기초생활유지에 적정	.841
반응성	.863	이의제기의 빠른 처리	.836
		담당공무원의 빠른 업무	.803
		담당공무원의 지원	.817
		자활사업담당자 친절	.845
근로환경	.771	기관과 좋은 사이	.731
		사업동료들과 좋은 사이	.723
적절성	.761	다른 일자리보다 적절	.600
		사업 적절	.577
		배우는 기술 적절	.760

자활사업의 만족도의 경우도 .896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활사업만족도에 대한 신뢰성 검증

요인	Cronbach's α	설문문항	설문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자활사업 만족도	.896	보수적정성 만족	.813
		반응성 만족	.862
		근로환경 만족	.820
		적절성 만족	.861

종속변수인 자활의지에 대한 신뢰성 역시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문항의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자활의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

요인	Cronbach's α	설문문항	설문문항 제거시 Cronbach's α
자활의지	.898	자활에 많은 도움	.854
		참여이후 근로의욕 상승	.869
		자활의지 고취	.897
		생활에 도움	.841

2) 타당성 분석

자활사업의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반응성, 근로환경, 적절성, 보수 모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모두 한계점을 초과하지 않았고 상태지수 또한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들의 적재값을 회귀분석으로 사용해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 자활사업 특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인	문항	반응성	보수적정성	적절성	근로환경
반응성	1	.805			
	2	.829			
	3	.805			
	4	.773			
보수	1		.825		
	2		.811		
	3		.848		
	4		.756		
적절성	1			.813	
	2			.840	
	3			.656	
근로환경	1				.651
	2				.857
eigen 값		5.158	2.283	1.298	1.045
설명비율		39.676	17.558	9.985	8.037
누적설명비율		39.676	57.235	67.220	75.257

KMO 측도 = 0.808, Bartlett 검정 = 652.535***

* $p < 0.05$, ** $p < 0.01$, *** $p < 0.001$

또한 자활사업만족도 및 자활의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자활사업만족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인	문항	자활사업 만족도
자활사업 만족도	1	.742
	2	.916
	3	.896
	4	.922
eigen 값		3.041
설명비율		76.032
누적설명비율		76.032

KMO 측도 = 0.766, Bartlett 검정 = 272.104***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8> 자활의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인	문항	자활의지
자활의지	1	.903
	2	.879
	3	.803
	4	.921
eigen 값		3.081
설명비율		77.031
누적설명비율		77.031

KMO 측도 = 0.827, Bartlett 검정 = 251.690***
* p < 0.05 , ** p < 0.01 , *** p < 0.001

2. 회귀분석

자활사업특성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자활사업의 특성과 만족도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활사업의 특성 4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은 29.1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된 R^2값은 0.548의 설명력을 보였다.

각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응성과 보수, 적절성은 $p<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근로환경은 $p<0.05$에서 유의수준이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만족도에 대한 반응성 .399, 보수 .474, 적절성, .373, 근로환경은 .201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보수가 자활사업 만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자활사업특성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008	.068			.121
반응성	.392	.068	.399	***	5.723
보수	.466	.069	.474	***	6.796
적절성	.367	.069	.373	***	5.348
근로환경	.199	.069	.201	*	2.889

F=29.151*** , R2=0.567 , adjusted R2=0.548
* p<0.05 , ** p<0.01 , *** p<0.001

자활의지와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자활의지와 만족도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활사업의 특성 4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 그에 따른 조절변수로 자활의지를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은 29.5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된 R2 값은 0.606의 설명력을 보였다.

각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응성과 적절성은 p<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보수와 자활의지는 p<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근로환경은 p<0.05에서 유의수준이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만족도에 대한 반응성 .256, 보수 .407, 적절성, .212, 근로환경 .154, 자활의지 .337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자활의지가 조절변수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자활사업 만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자활의지와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010	.064			.151
반응성	.251	.074	.256	**	3.398
보수	.400	.066	.407	***	6.023
적절성	.209	.077	.212	**	2.720
근로환경	.153	.066	.154	*	2.326
자활의지	.328	.087	.337	***	3.760

F=29.592*** , R2=0.627 , adjusted R2=0.606
* p<0.05 , ** p<0.01 , *** p<0.001

수급자적 특성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수급자적 특성과 만족도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활사

업의 특성 4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 그에 따른 조절변수로 수급자적 특성(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은 23.2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된 R2값은 0.544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다르게 수급자적 특성을 조절변수로 삽입하여 분석한 결과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자활사업의 참여에 있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의 신설도 필요할 것이다.

<표 11> 수급자적 특성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054	.131			-.414
반응성	.389	.069	.397	***	5.656
보수	.464	.069	.472	***	6.727
적절성	.369	.069	.374	***	5.343
근로환경	.195	.070	.197	**	2.804
수급자여부	.087	.155	.040		.560

F=23.203*** , R2=0.569 , adjusted R2=0.544
* p<0.05 , ** p<0.01 , *** p<0.001

자활사업의 참여기간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자활사의 참여기간과 만족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활사업의 특성 4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 그에 따른 조절변수로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을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F값은 24.3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된 R2값은 0.559의 설명력을 보였다.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에 따라 각각의 독립변수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참여기간은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차활사업에 오랜 기간 참여했던 것과 관계없이 만족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따라서 자활사업의 만족여부는 보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자활사업참여기간과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082	.143			-.577
반응성	.391	.069	.397	***	5.639
보수	.469	.071	.472	***	6.643
적절성	.392	.070	.391	***	5.635
근로환경	.195	.069	.197	**	2.847
자활사업참여기간	.038	.047	.059		.818

F=24.349*** , R2=0.583 , adjusted R2=0.559

* p<0.05 , ** p<0.01 , *** p<0.001

Ⅴ. 나가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의정부시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는 있으나 자활사업의 특성과 자활의지에 따라 그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없었으나 자활의지에 따른 차이는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 도입을 전제로 자활사업의 세부 개편방안 즉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가능집단의 표적화'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이는 공적 전달체계의 'Case Conference'를 통해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파악하고, 욕구와 능력에 따라 참여해야 할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립촉진지원제도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을 포착한다. 여기서는 여성가장, 중고령층, 청년실직자를 주요한 지원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들도 계층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장려금' 및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먼저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수당이나 보너스(bonus)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작업성과 및 취업성과에 따라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체계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현재 적립하고 있는 수익금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급의 확보를 통해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다면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현

재 자활사업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자가 제한적 규모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직업훈련제도의 목표는 실제 취업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훈련제도의 운영방식에 있어, 공인 직업훈련기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기관을 개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사한 미취업 빈곤층 대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활사업의 성과관리 시범사업과 취업패키지사업을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 자활사업의 경우 타 제도와의 중복가능성이 있어 자활사업으로 통합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을 연계하는 방인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별 사례관리는 초기 상담부터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일차적으로 심층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및 의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가구 여건 파악에 기초하여 개인별로 특화된 개인별 자립촉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상황을 관리하여 취업능력 제고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들을 조정해야 한다. 지역 내 복지·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근로빈곤층의 복합적인 복지·취업 욕구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자활사업을 자활지원센터나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사후관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중복지원 또는 참여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종료될 경우 직접 또는 민간 위탁을 통하여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수행한다.

다섯째, 현재 자활사업 지원정책 중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은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통해 개인창업, 공동창업,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추진해 왔던 '희망키움 뱅크사업' 외에도 최근 출범한 '미소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활사업의 성패는 지속성과 참여성에 있을 것이며, 따라서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자활사업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옥. (1988). 「우리나라 공적부조전달체계 개선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병구. (2008).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및 탈빈곤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편).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강신욱・성명재・이철인. (2008).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강신욱 외. (2008).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 (2차년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보고서 2008-01-2.

강혜규.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10월.

_____. (1997). 「보건복지사무소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한울아카데미

구인회. (2002). "복지에서 근로로: 미국 사회정책의 이행과 그 교훈".「한국사회보장학」. 제16권.

_____. (2009).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새로운 모색, 중앙자활지원센터자활복지포럼·한국사회복지학회. (편). 자활정책의 현황과 미래.

곽효문. (1995). 「복지정책론」. 서울: 제일법규

김기영・강현철. (2001).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김계수. (2001).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김규한. (2008). 한국의 대안금융전문기관 설립방안, 금융소외연구포럼 통권 1호.

김말란. (2009). 경상북도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성훈. (2008). 자활사업 참여특성과 만족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란. (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 41-70.

김영철·이민환. (2007). 양극화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연구」, 15(2): 79-104.

김정원. (2009). 지역자활센터 활동 현황을 통해서 살펴본 자활사업의 방향, 자활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토론회 자료집, 지역자활센터의 활동현황을 통해 바라본 자활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김주섭·이규용·박성재. (2007). 일자리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필두. (1996). 「한국의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완・전지현. (2009). 자활 전달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년 2월.

김혜원. (2008).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방안, 「노동리뷰」, 통권 제44호.

노동부. (2009). 2009년 저소득층 취업패키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_____. (2009). 고용보험 백서.

_____. (2009).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_____. (2009).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이드 북.

노대명. (2006). 근로빈곤층의 소득 및 신용증진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확대방안, 제1회 쿨머니 컨퍼런스 자료집. (신용양극화 시대, 금융의 사회책임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역할).

_____. (2008). 자활, 지난 1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중앙자활센터. (편).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설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_____. (2009). 마이크로크레딧과 저소득 금융소외계층 지원정책의 중요성, 사회연대은행 2008 연차보고서.

_____. (2009). 자립촉진지원제도. (가칭) 도입방안, 미간행 보고서.

노대명 외. (2007).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2008).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만희. (2008). 자활사업의 운영구조의 전략적 전환, 「사회보장연구」, 24. (4). 117-138.

배기효・이옥희.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복지행정체계의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총」. 10.

백학영・고미선.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전망에 관한 연구.

박현숙. (2009).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만족영향 요인분석,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찬임 외. (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_____. (2009). 자활사업 안내.

_____. (2009).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 대책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최종보고서, 미간행.

_____.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 2009년도 자활사업안내.

_____.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2010년도 자활사업안내.

성규탁. (2000).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손능수. (2005). 자활사업의 수혜자 민족도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심성지. (2008). 자활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의 모색. (독일 MoZArT-Project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8권 제3호, 2008년 12월, pp.191~226.

심창학. (2008). 활성화. (activation). 활성화 레짐. (activation regime) 그리고 한국 사회 보호 체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여유진. (2009a). 경제위기에 따른 공공부조제도 확충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8호.

_____. (2009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여유진 외. (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훈. (2002). 「자활훈련대상자의 직업능력 개발실태 및 과제」. 서울 : 직업능력개발원.
유한욱. (2008). 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30(1): 131-170.
이기연.박지영.이은정.류주연.장세연.최은성. (2008). 지역사회 복지・고용 통합사례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자활사례관리모델개발, 보건복지부・이화여자대학교.
이상은. (2007).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3호.
이상은 외.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 및 급여수준 국제비교, 숭실대학교・보건복지부.
이석원・정희정. (2008). 자활사업의 유형별 고용촉진효과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이태진 외. (2008).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기반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수급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강신욱. (2008).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정책 핵심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전영준. (2007). 근로장려세제 관련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전영준. (2008).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재정학연구」, 1(4): 1-43.
전영준. (2009).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월간 노동리뷰」, 2009년 8월호.
정인서·윤영숙. (2009).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2(1): 411-434.
정진호·이병희. (2008).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편).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최현수. (2007). 근로장려세제. (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와 근로장려세제. (EITC)관련 동향 및 쟁점, 빈곤포럼 자료집 2007-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와 근로장려세제. (EITC) 관련 동향 및 쟁점, 빈곤포럼 2007-36.
_____. (2009).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한상진. (2008).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전략: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넘어서, 노동사회 2008년 4월.

허재준. (2008).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 강화방안, 「노동리뷰」, 통권 제38호.

홍경준. (2008). 자활사업의 성과 평가: 일에 대한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이병희 외. (편).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2000).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황덕순. (편).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_____. (2008). 한국에서의 활성화 정책의 가능성과 조건, 이병희·김혜원·황덕순·김동헌·김영미·김우영·최옥금. (편).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김혜원·박찬임·이병희. (2008). '일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이병희. (2009). 일자리 위기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working poor의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olin lindsay & Mikkel Mailand. (2004). "Different routes, common directions? activation policies for young people in denmark and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3: 195-207.

Erine Lightman, Andrew Mitchell and Dean Herd. (2005). "Welfare to What? After workfare in Toronto", ILO,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8(4): 95~106.

Ivar Lødemel & Bruce Stafford. (2002). *Social integration though obligation to work: Current European "workfare" initiatives and future direction*, Fafo, Institute for Applied Social Science.

Ivar Lødemel and Heather Trickey ed. (2002). *An Offer You can't Refuse Workfar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Policy Press.

Jean-Claude Barbier & Wolfgang Ludwig-Mayerhofer. (2004). "Introduction: The many worlds of activation", *European societies*, 6(4): 423-436.

Jochen Clasen & Daniel Clegg. (2006). "Beyond activation: reforming european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 in post-industrial labor markets", *European Societies*, 8(4): 527-553.

OECD. (2007). *Benefits and Wages.*

Rune Halvorsen & Per H. Jensen. (2004). "Activation in scandinavian welfare policy; Denmark and Norwa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6. (4). 461-483.

Thomas Lorentzen & Espen Dahl. (2005). "Active labor market programes in Norway: ara they helpful for soacial assistance recipient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5(1): 27

Thomas Lorentzen & Espen Dahl. (2005). "What works for whom? An analysis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in Norwa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86-98.

Thomas Lorentzen. (2006). Social assistance dynamics in Norway *Doctoral dissertation*, Fafo-report 546.

Trudie Knijn, Claude Martin and Jane Millar. (2007). "Activation as a common framework for social policies towards lone parents", *Social Policy & Adminstration*, 41(6): 638-652.

Wolfgang Ochel. (2005). "welfare to work experiences with specific work-first programmes in selected countri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8(4).

Walker, R. (1999). "Welfare to Work vs. Poverty and Family Change : Policy Lessons from the USA," Work, *Environment & Society*, 13(3): 539~553.

Walter, M. (2002). "Working Their Way out of Poverty? Sole Motherhood, Work, Welfare and Material Well-Being," *Journal of Sociology*, 38(4): 361~380.

Westbrook, R. A. and Reilly, M. D. (1983). "Value-percept disparity : An alternative to the disconfirmation of experience," I*nternational fare in Consumer 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2~9.

Wolfe, B. L. and Hill, S. (1995). "The Effect of Health on the Work Effort of Single Mother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

Yi, Youjae. (1990). "A Critical Review of Consumer Satisfaction," Review of Marketing, Valarie A. Zeithaml. (ed.).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68~123.

접수일(2011년 02월 12일)
수정일자(2011년 02월 26일)
게재확정일(2011년 03월 15일)